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李榮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소비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욕구가 과거의 양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기능성·기호성 등 질적인 면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소비패턴이 각종 편의식품·냉동식품 등의 위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대장균 O-157: H7 등)에 의한 식품오염 기회가 증가하고, 외식 및 단체급식의 빈도가 늘어감으로써 식중독 사고도 점차 집단화·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식품(GMO)이 상용화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약 및 항생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식품의 저장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증가, 다이옥신과 같은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새로운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

첫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추진을 위하

여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생산·육성 전담부서의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관리업무와 통합·일원화를 추진하고, 식품의 위해도관리의 전문성 여부, 유통의 범위(전국적, 지역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기능 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식품 등에 잔류하는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Monitoring 및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식품등의 기준·규격 개선 등 효율적 위해관리방안(Risk Management)을 마련하여, 위해평가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이해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Risk Communication)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현재 과학기술의 제한성 및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식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의 개연성이 있는 원료(성분)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 Principle)을 도입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확대를 통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넷째, 식품안전관리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관련규정 제·개정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식품관련단체·소비자·시민단체·관계전문가 등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도·단속분야, 조사·연구분야, 교육·홍보분야 등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업무를 수행하며, 식품안전관련 국내·외 최신정보 수집, 분석, 공유기능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다섯째,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유용성·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유용성 표시기준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공기준(Food-GMP)을 마련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하여 업계의 생산성·자율성을 제고하며,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시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 관련업소는 물론 소비자들도 이를 이해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